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서정의 회장 등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 농협개혁위원회 참석

- '농협법 개정 건의안' 의결, 농협법 개정 급물살
- 농협개혁 핵심안은 복수안으로 제출
- 정부 입법예고안 발표, '핵심 요구안 빠졌다' 반발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이 지난 9월 4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9차 농협개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부에 건의할 농협법 개정검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통만 거듭하던 농협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3대 핵심과제 중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기와 방법을 합의하지 못해 농민단체와 농협이 각각 복수안을 농림부에 제출했고,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중앙회 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농협과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개혁안을 토대로, 10월 4일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사업연합회 법인 인정, 부가의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11월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한, 시군지부 폐지, 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농민들의 반발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신경분리가 빠져있는 것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1단계 조치' 이고 관련사항은 '부칙'에 넣고 미진한 내용은 법개정 과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조합연합회에 지역조합도 가입을 허용하자는 농민단체의 의견과는 달리, 준회원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됐으며, 조합장 명예직 전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중앙회 총회에서 조합이 갖는 1조합1표를 조합원 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을 가능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가의결권 문제도 협동조합 정신에 비추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탁명구 사무총장은 "법안 검토 결과 개선점도 있으나 중앙회 신·경분리를 비롯한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통해 관철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향후 농협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하연합회소식

한농연전남도연합회, 학교급식조례제정 재의요구 규탄 행자부 항의방문

- 자치단체 입법권 침해, 행자부는 '행정통제부'
- 장관면담 상경농민, 경찰 가로막아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를 비롯한 광주·전남농민연대(준),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와 서울시 운동본부 50여 명은 지난 8일 오후2시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행정자치부에 항의방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24일 행정자치부가 재의결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를 철회하고,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항의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을 면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방해와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비협조로 인해 새벽부터 전남에서 버스를 타고 상경한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경찰은 서울로 상경한 항의방문단을 직접 인도해 행자부 앞에 도착했다. 그러자 갑자기 잘 정렬된 경찰 2개 중대 병력이 항의방문단을 에워쌌다. 시위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과 면담을 하려고 온 것인데, 경찰이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경찰병력에 둘러싸여 기자회견은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후인 3시경에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이복흠 회장은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행정통제부”라며 “안전한 우리농축산물로 학교급식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서 열린 행자부장관면담은 애초 나오기로 한 장관이 없어 차관보와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에서 항의방문단 모두 정부청사 안으로 진입하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대표자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굳게 닫힌 철문 밖 보도로 내몰렸다. 바로 옆문으로는 일반시민들이 정부청사 안에 있는 농협과 우체국을 이용하기 위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데도, 평화적인 목적으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진입을 막자 들어가지 못한 방문단은 더욱더 행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면담은 정부중앙청사 1층로비에 있는 상담실에서 오후 4시경 차관보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진행도중 뒤늦게 차관보도 함께 참석해 항의 방문단 대표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행자부 차관은 면담요청자들을 경찰병력이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

의요구에 대해서는 “심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지만, 법률상 어쩔수 없었고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역 수해복구 지원 땀방울

- 충북 회원들 경남지역 일손 보태
- 내 일보다는 피해 많은 동지부터 도와줘 흐뭇

태풍매미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이 수해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지난달 29일 한농연 충북도연합회 이홍세 회장과 도임직원을 비롯한 청주시연합회(회장 김현기), 영동군연합회(회장 박국현)에서는 수해를 입은 경남도 김해시 주촌면과 대동면 화훼단지를 방문해 수해복구 활동에 발 벗고 나서, 경남지역의 수해농가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복구 작업은 주로 시설하우스를 다시 복구하고, 못쓰게 된 철골을 철거하는 작업과 폐비닐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영동군연합회 박국현 회장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해를 입은 경남도 회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충북도연합회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때, 다른 지역에서 복구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왔던 농업경영인들의 고마움을 상기하며 경남도 지역에 복구지원을 나섰다고 한다.

한편, 강원도연합회(회장 김병석)에서도 각지의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자신의 일을 뒤로 한 채 수해 현장을 찾아와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한편, 복구 물품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

한농연평창군연합회(회장 이찬균)는 지난달 27일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도암면 횡계마을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감자캐기를 도왔고, 삼척시연합회(회장 김상용)에서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성시연합회원들의 방문을 받고 쌀과 담요를 비롯해 김치 등 물품을 전달받았으며, 21일에는 파주시연합회(회장 이윤호)로부터 구호물품을 전달받았다.

또한 정선군, 화천군을 비롯한 그 밖의 각 지역에서도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들을 먼저 도우며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었다.

경북도 농업인의 날 개최

한농연 경북도연합회가 오는 11월 7일(금) 국제보상공원에서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엔 개최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기존의 개최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는 달리, 최악의 상황에 몰린 농업현실을 한층 더 부각시켜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를 성공적

으로 개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단체는 한농연경북도연합회를 비롯해 한여농경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촌지도자협회, 전업농경북도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우리농업사수'와 '쌀 지키기', '농민생존권 생취' 등 3대 요구사항 설명회를 갖고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의 총력투쟁 결의를 다질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 밖에 '농업현안 전시'를 하고 한여농경북도연합회에서 준비한 '쌀 음식 나누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故 이경해 열사 추모 행사 전국적으로 확산

한농연 장흥군연합회를 비롯한 장흥군 농민연대에서는 9월 23일 오후 8시에 故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는 촛불추모 집회를 군민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WTO 5차 각료회의의 칸쿤 투쟁보고와 이경해 열사 육성녹음 테이프를 방송했다. 또한 20일 운구행렬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유족, 농민들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배상도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故 이경해 열사의 약력보고, 경과보고, 조사·추모사·추도시 낭독, 분향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흥군민과 농민 250여명이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장흥군민회관에서 장흥군청까지 1시간여의 가두행진을 실시했다.

장흥군 연합회 오형주 회장은 "개방농정을 철회하고 농업의 희생과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농민들과 함께 농업 근간을 뒤흔드는 개방 농정에 적극 대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농협 지역조합장 선거제 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 불법선거 처벌도 대폭 강화=

불합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농협의 선거제가 대폭 개편된다.

농림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 농협 중앙회장이 선거관리를 위탁토록 결정할 수도 있다.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도 현행 2년이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지역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도 마련돼 법 개정이후 상임 조합장은 3회 연속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전문 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장은 현행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집행간부 임면권을 갖게 된다.

중앙회장 등 선출시 조합의 의결권은 현행 1조합 1표에서 조합원수에 따라 1~3표로 차등화된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신.경 분리 시기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신.경 분리시기는 농민단체와 농협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입법예고 등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라도 의견 제출이 있으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농, '이라크 파병'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해 각 시민단체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8일부터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불과 몇 시간만에 각 당에 파병방침을 통보하고 지난 18일 오전 기습적으로 파병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여농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대미 굴종적인 사대주의 국가임을 자임하는 길'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전여농은 '정부는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청년실업과 농가부채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통령에게 파병에 대한 책임을 물고',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전여농을 비롯한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는 지난 17일 1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이라크 파병 거리찬반투표' 선포식을 갖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국 10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병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편, 대학생들은 지난 7일에서 9일간 '이라크 파병 거리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투표에서 전국 37개 대학의 57,332명이 투표에 참가해, 44,492명(77.6%)이 반대했고 12,236명(21.3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농업 비상사태' 결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산물 개방을 앞둔 현 상황을 우리 농업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9월 22일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동안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농업 시장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하개발 어젠다 즉 DDA 협상으로 국내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농업 비상사태 선언문'을 채택했다.

농림해수위는 선언문을 통해 국내 농업 위기는 그동안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을 소홀히 해 온 관계부처에도 책임이 크다고 엄중 경고하고, 이번 농업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이번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의 경우 관세화가 유예돼 농업 시장 개방 폭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 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6일 낙농육우협회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육우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배정식 과장이 육우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육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육우시식회 개최와 브랜드 유통점 개설, 육우 육질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대정부 건의내용 등에 대해 설명.

논의사항으로는 육우농가들의 의견수렴 및 농가간 단합과 정보교류 등을 위한 기구를 육우분과위원회 내에 구성키로 하고,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기구 명칭을 '육우산업 발전대책 협의회'로 정하고, 협의회장에 김남용 위원장을, 부회장에 이훈구씨(충남 예산)를, 총무에 황진호(충북옥천)씨를 선임하였다. 또한, 협의회 구성원은 당일 회의 참석자와 지역대표 농가, 지회장 등 추천대상농가로 하기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를 회원으로 참석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 가락동 공판장 임남빈 실장이 출하비율이 한우는 작년대비 78%, 육우는 124%에 달하고 있으며, 육우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육우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차기회의에서는 주문화 시대에 맞는 소비자 기호 파악 등 육우얼굴찾기(홍보)방안과 2등급 육우 극복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 아울러, 육우고기 판로확대와 수요창출을 위해 공무원 연금매장, 하나로마트, 각 시도 산하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민농연**